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

해외직구 급증에 따른

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

2024. 5. 16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[요 약] ····· i

Ⅰ. 추진배경 및 경과 ····· 1

Ⅱ. 추진방향 ····· 3

Ⅲ. 분야별 대응 방안

1. 소비자 안전 확보 ····· 4
2. 소비자 피해 예방 · 구제 강화 ····· 9
3. 기업 경쟁력 제고 ····· 13
4.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····· 17

Ⅶ. 향후 계획 ····· 19

※ 붙임 :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

해외직구 급증에 따른

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(요약)

1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우리 국민의 **해외직구 지속 증가***, 특히 **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****

* 해외직구 거래액 : ('21)5.1조원 → ('22)5.3조원 → ('23)6.8조원(27%↑) → ('24.1Q)1.6조원(9.4%↑)

** 앱 이용자 순위 : ('23.2) ①쿠팡 ②11번가 ③G마켓 ④위메프 ⑤티몬 ⑥알리
('24.3) ①쿠팡 ②알리 ③테무 ④11번가 ⑤G마켓 ⑥위메프

→ **안전 문제, 소비자 피해, 기업 경쟁력 약화** 등 복합적 이슈 발생

주요 이슈	문제점
① 안전 문제	• **인체에 유해,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**이 **안전장치 없이** 국내 반입
② 소비자 피해	• **가품·불량품 유통, 반품·환불절차 미비** 등 피해 증가 및 구제 미흡
③ 기업 경쟁력	• **각종 세제·인증규제 미적용, 국내 유통업계**와 **소상공인**의 **경쟁력 저하**

□ 범정부 대응을 위해 「**해외직구 종합대책 TF**」 구성(3.7~, 14개 부처), ①**소비자 안전 확보** ②**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** ③**기업 경쟁력 제고** 등 대책 검토

* 대응이 시급한 소비자 피해 예방·구제 분야는 일부대책 기발표(3.13, 비경)

2 분야별 주요 대책

1 소비자 안전 확보

< 위해제품 관리 강화 >

○ 국민 건강·안전에 직결된 **어린이제품**(34개 품목), **전기·생활용품**(34개 품목), **생활화학제품**(12개 품목)은 **안전조치 없이는 해외직구 금지**

구분	대상 품목 및 개선 방안
어린이제품	• 물놀이 기구, 완구, 유모차 등 34개 품목 ⇒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
전기·생활용품	• 전기온수매트, 전기욕조, 배터리 등 34개 품목 ⇒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
생활화학제품	• 가습기용 소독·보존제, 살균제, 살충제 등 12개 품목 ⇒ 신고·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

* 어린이제품법, 전기생활용품안전법, 화학제품안전법 개정

○ **화장품, 위생용품, 의약외품, 석면 및 납·카드뮴 함유제품 등은 사후 모니터링·위해성 검사** 등을 통해 **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 차단**

* 화장품법, 위생용품관리법, 약사법, 석면안전관리법 개정

○ **의약품,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***

* 약사법 개정, 불법 의약품·의료기기 등 통관차단 강화, 대국민 홍보 강화 등

< 가품 차단·개인정보 보호 강화 >

○ **(가품 차단) 통관차단 강화***(관세·특허청 협업), **플랫폼 제재 근거 마련**

*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(시범사업, '24下), 특허청-관세청 보유정보 매칭시스템 도입('24.5)

○ **(개인정보 보호) 개인정보위·방통위 집중점검**, 상반기 중 **결과 공표** 및 **미흡 사업자 대상 개선조치**

* (개인정보위)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 중('24.2월~6월)
(방통위) 앱 접근권한 관련 위반 여부 기점검('24.3월~), 결과 분석 중

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

○ **(실태조사·점검)** 범정부 **조사·점검**을 통해 **결과 공표 및 관련 조치 시행**

* 10개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,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 점검·조사 실시

○ **(실효성 확보) 소비자 피해구제** 및 **분쟁해결, 법적 제재** 및 **책임부과** 등을 위한 **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***, **자율협약 체결****·**핫라인 구축** 등 병행

* 공정위, 산업부(국표원), 특허청 등 법률 개정 추진
** 공정위·방통위·식약처·과기정통부 등 4개 부처 추진

○ **(정보 통합관리) '소비자24'**를 **개편**해 **분산된 해외직구 정보***를 **통합관리**

* 공정위, 관세청, 식약처, 환경부, 국표원, 한국소비자원 등 12개 포털 운영 중

3 기업 경쟁력 제고

○ **(유통 플랫폼)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**(풀필먼트) **보급 확산** 및 **고도화 기술개발**,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한 **물류센터 공유 활성화** 추진

※ 「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」('24.9) 및 「유통·물류 AI 활용 전략」('24.10) 등 추가대책 발표 예정

○ **(유통 소상공인) 브랜드 인큐베이팅*** 등 **품목 다변화, 소싱 대상국 다변화**를 통한 **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**

* (예시) A기업은 유망 중국산 제품(마사지기기류)을 발굴하고 제조 과정에 관여하는 등 자체 브랜드화를 통해 연 매출 130억원의 건강 전문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

○ **(역직구 확대)** 우리 유통·제조기업의 **글로벌 플랫폼 입점**을 위해 **마케팅** 등 **지원 강화***, 중소업체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**해외공동물류센터*** **확대**

* 해외 쇼핑몰 직접입점 및 마케팅 지원을 ('23) 400개사 → ('24) 900개사로 확대

** 미국·일본·동남아 등에 판매된 우리제품 배송 물류 지원, ('23) 261개 → ('24) 270개

○ **(생태계 활성화)** **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** 등 **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·해소, 온라인 유통산업 육성 근거 마련** 등

④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

○ **(면세)** 국내사업자와 **역차별 문제 해소** 등을 위해 **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, 소액면세 악용*** **방지**를 위한 **단속 강화**

* 의도적인 분할(쪼개기), 면세 통관 후 상용으로 판매

○ **(통관)** **위해제품 차단**을 위해 **통관 서식 기재항목 확대**,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**최적화된 통관 플랫폼 구축, 인력·전문성 보강** 추진

3 향후 계획

□ **(법률 개정)** 위해제품 관리 강화, 국내대리인 지정 등 **연내 신속 개정 추진**

○ **법률 개정 전**까지는 **관세법***에 **근거한 위해제품 반입차단 실시**

* (관세법 제237조)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

□ **(홍보 강화)**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**소비자24**는 **5.16일**부터 **가동, 해외직구 유의사항, 위해물품 정보** 등 **대국민 안내·홍보 강화**

○ 이를 통해 **정보가 불분명한 제품**은 **소비자의 신중 구매**를 **유도**

□ **(대책 점검·보완)**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은 **해외직구 TF**를 통해 **주기적 점검, 상황에 따른 추가·보완대책**도 **마련**

☞ **복잡·다양·산발적**으로 발생하는 **이슈** 특성 상 **관계부처 TF 지속 가동, 진행상황 점검** 및 **추가·보완 대책*** **신속 마련·추진**

* △개인정보 침해 등 범정부 실태 조사·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

△유통산업·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대책

△기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 대응

Ⅰ. 추진배경 및 경과

1 추진배경

□ 코로나19를 전후하여 **세계 온라인 유통 시장***이 **폭발적**으로 **성장**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**"해외직접구매**(해외직구)"도 **대폭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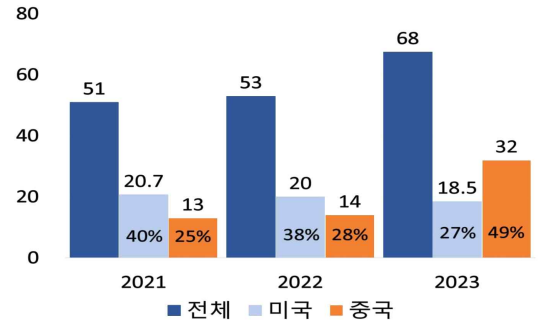
*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(Statista, 조$) : ('17) 2.4 → ('19) 3.4 → ('21) 5.0 → ('23) 5.8

○ **우리 국민**의 **해외직구 거래액**은 **지속 증가**하고 있고, **국가별 점유율**은 그간 **미국**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**중국**으로 **변화**

○ 한편, 해외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비해 **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**는 **정체**, 우리나라의 **온라인 해외판매**(역직구) **거래액**은 작년 **감소***

* 온라인 해외판매액(통계청) : ('21) 4.4조원 → ('22) 1.8조원 → ('23) 1.7조원

해외직구 거래액 (천억원)



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 (만명)

순위	플랫폼	'23.2월	'24.2월	'24.3월
1	쿠팡	2,953	3,010	3,087
2	알리	355	818	888
3	테무	('23.7 출시)	581	830
4	11번가	944	736	740
5	G마켓	655	553	548
6	위메프	436	320	411
7	티몬	422	361	380

* 출처: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

□ **해외직구**의 **확대**는 **안전 문제, 소비자 피해** 등 **다양한 이슈**를 **제기**

○ (안전 문제) **어린이 제품**,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**생활·전기용품** 등이 직구를 통해서 **안전인증 없이 국내 반입** 중

* 관세청이 단속 중인 위해 식·의약품 등도 '23년 적발 건수가 26만 건 이상

○ (소비자 피해) **가품·불량품** 유통, **반품·환불** 미비 등 피해 증가, 반면 해외플랫폼은 **피해구제**에 **소극적**이고 **제재 수단**도 **부족**

* 해외 플랫폼 이용자 중 80.9%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(4.1, 대한상의)

○ (기업 경쟁력) **낮은 생산원가**, 소액물품에 대한 **관·부가세 면제*** 등에 따른 해외직구 증가는 국내 **유통소상공인과 제조업체**의 **경쟁력 저하**로 연결

* 소액물품 직구(150불 이하)에 대해서는 한도·횟수 제한 없이 관·부가세 면제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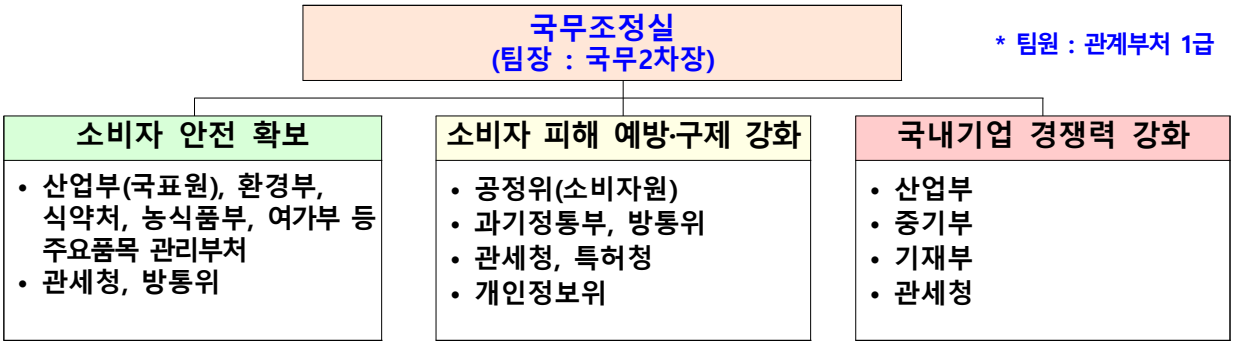
☞ **해외직구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**

2 추진경과

□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(3.7)를 통해 「해외직구 종합대책 TF」 출범*

* 3.7 보도자료 배포 (산업·중기부, 공정위, 관세청 참석)

○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14개 부처 참여, ①소비자 안전 확보 ②소비자 피해 예방·구제 강화 ③기업 경쟁력 제고 등 대책 마련 추진



○ 이 중, 단기적 대응이 시급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 대책* 기발표(3.13)

* 플랫폼 실태조사,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고객센터 설치, 플랫폼 자율협약 추진 등

□ 약 2달간 20여 차례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분야별 면밀한 검토 진행

○ (소비자 안전 확보) 물품 수입 관련 65개 법률 조사 → 위험도, 국민 편익, 통관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방안 검토

- 개인정보, 지식재산권 등 각종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도 검토

○ (소비자 피해 예방·구제 강화) 피해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·조사와 함께 실효성 확보 수단 검토

○ (기업 경쟁력 제고) 산업·중기부 중심 국내 유통 산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검토

○ (면세제도 검토) 현행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 검토(기재부), 면세 악용사례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(관세청) 등

Ⅱ. 추진방향

정책방향

◈ 해외직구 소비자의 안전 · 보호 강화

◈ 국내 온라인 플랫폼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

① 소비자 안전 확보

안전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

· 어린이제품(34개 품목)
· 전기·생활용품(34개 품목)
· 생활화학제품(12개 품목)

유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

· 화장품, 위생용품, 의약외품
· 석면·납·카드뮴 등 함유제품

기존 금지품목 관리 강화

· 의약품, 의료기기
· 수도 관련 제품,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

②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

해외플랫폼 점검 및 실태조사

· 해외플랫폼 운영실태 조사
· 플랫폼 판매 제품 점검

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

· 국내 대리인 지정
· 자율협약 체결

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

· '소비자24' 통합 정보 제공

③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

유통 플랫폼 고도화

· 첨단 유통인프라(풀필먼트) 구축
· 첨단기술 활용 유통 R&D 추진
· 물류센터 공유 등 효율화

유통소상공인 새로운 기회 창출

· 품목 다변화(브랜드 인큐베이팅 등)
· 소싱 다변화(동남아, 인도 등 개척)

중소 유통제조기업의 역직구 확대

·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컨설팅
· 물류 지원 강화

④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

면세

·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

· 소액면세제도 악용 방지 단속강화

통관

· 위해물품 관리 집중을 위한 시스템 구축

· 통관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

Ⅲ. 분야별 대응 방안

1. 소비자 안전 확보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국민 안전·건강에 직결되는 **제품이 안전장치* 없이 국내 반입 중**

*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등 안전 인증을 받고 국내 유통 중

○ (공산품)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**어린이제품**,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**전기·생활용품, 생활화학제품** 등이 **안전 규제 없이 반입***

* 해외직구 구매대행 시 어린이용품(34개), 전기생활용품(34개)은 KC인증 없이는 반입이 차단되나, 해외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직접 구매는 가능

○ (화장품·위생용품 등) 피부 및 신체 접촉이 빈번한 **화장품, 위생용품, 장신구*** 등은 **안전 검사 없이 국내 반입**

* "알리·테무 판매 장신구 404개 중 96개(24%)에서 기준 초과 발암물질 검출" (4.7, 인천세관)

○ (의약품 등)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약품, 의료기기 등도 **불법 반입**이 **급증***하는 등 **국민 안전**을 **위협**

*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(건) : ('21) 678 → ('22) 849 → ('23) 6,958

□ **지식재산권 침해제품**(가품)**·개인정보 유출** 등 **비정형적 위협**도 **증가**

○ (가품) **반입 급증***에 따른 **K-브랜드**와 **국내 소비자 피해** 우려도 증가

*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(관세청, 만 건) : ('21) 2.9 → ('22) 4.5

○ (개인정보) **개인정보 처리방침* 위배, 앱 접근 권한 미고지 등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**도 지속 제기

* 해외플랫폼 기업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나(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), 수립된 처리방침의 구체성·적정성·가독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

2 대응방안

◈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위해제품 관리 강화
◈ 지식재산권 침해(가품), 개인정보 유출 위협 철저 대응

1. 위해제품 관리 강화

①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

□ 어린이제품[산업부]

○ (현황)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**어린이제품**은 **각별한 관리**가 필요하나, **해외직구**의 경우 **안전 인증없이 국내 반입**

○ (대책) 유모차, 완구,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**어린이제품 34개 품목**은 **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**

※ 어린이제품법 개정 추진('24)

□ 전기·생활용품[산업부]

○ (현황) 일부 전기·생활용품은 **화재, 감전, 화상 등의 사고 발생**이 우려되나, **해외직구**의 경우 **안전 인증없이 국내 반입**

○ (대책)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, 전기찜질기, 전기충전기 등 **34개 품목**은 **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**

※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('24)

□ 생활화학제품[환경부]

○ (현황) **유해성분** 등이 **포함된 제품**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**신체상 위해가 우려**되나, **해외직구**의 경우 **승인·신고 등 없이 국내 반입**

○ (대책) 가습기용 소독·보존제, 살균제, 보건용 살충제, 보건용 기피제 등 **12개 품목**은 **신고·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**

※ 화학제품안전법 개정('24)

②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 차단

□ 화장품·위생용품 등[식약처]

○ (현황) **피부에 직접 접촉**되는 화장품·위생용품·의약외품* 등은 **유해성분·물질 포함 우려**가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**별도의 검사 없이** 국내 반입중

* (화장품) 사용불가 원료로 납, 니켈 등 1,050개를 지정
(위생용품) 기저귀, 일회용 수저 등 19개 품목
(의약외품) 치약, 생리용품 등 43개 품목

○ (대책) **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, 위생용품·의약외품 위해성 검사** 등을 **실시**하여 **유해성이 확인된 제품**은 **국내 반입 차단**

※ 약사법, 화장품법, 위생용품관리법 개정('24)

□ 석면, 납·카드뮴 함유제품 등[환경부·산업부]

○ (현황) **석면 함유제품**(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)과 **납, 카드뮴** 등 **기준치**를 **초과**한 **장신구, 유해**한 **생활화학제품**(방향제·탈취제 등)이 해외직구로 **유입**

○ (대책) **석면 함유제품, 생활화학제품**(방향제·탈취제 등 32개 품목)은 **모니터링**을 통해 **유해성이 확인된 제품**은 **국내 반입**을 **차단**

※ 석면안전관리법, 화학제품안전법 개정('24)

- **장신구** 등은 **모니터링, 안전성 조사 등**을 **지속 실시***하여 **추가 조치 시행**

* (환경부) '24.5~11월 매월 100개 직접 구매 후 위해성분 조사·분석
(산업부) '24년 말까지 접촉성 장신구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

③ 기존 해외직구 금지 품목 관리 강화

□ 의약품[식약처] / 동물용의약품[농식품부]

○ (현황) **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, 일부 제품**은 **국내 반입**되고 있어 **안전성 우려 증가**

○ (대책) **의약품** 등 **직구 차단 명확화**를 위해 **약사법 개정 추진**('24)

- **법 개정** 전까지는 **위해·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집중 차단**
- **불법 의약품 직구 피해 방지**를 위해 **대국민 홍보 강화**를 통한 **신중 구매 유도,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 추진**

※ 약사법 개정('24)

□ 의료기기[식약처]

○ (현황) 무허가 의료기기는 **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이 전면 금지**되나, **전자혈압계, 보청기, 비접촉식 체온계** 등의 **불법 직구 적발사례 증가**

○ (대책) **통관 협업검사 강화** 및 **해외플랫폼 자율차단 유도**,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**특별·기획점검** 및 **해외직구 위험성 홍보 추진**

□ 수도 관련 제품,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[환경부]

○ (현황)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**수도꼭지류**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**주방용 오물분쇄기**는 **인증제품만 해외직구 가능**

- **요소수 무력화 장치**는 **경유차의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초래하는 품목**으로 **국내사용**은 **불법**이나 **반입 차단**에 대한 **근거**는 **불명확**

○ (대책) **통관단계**에서 **수도꼭지,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**를 **별도 확인**하도록 하여 **반입절차 엄격 관리**

- 설치가 불법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**반입 차단**을 위한 **근거규정 신설**

※ 대기환경보전법 개정('24)

2. 지식재산권 · 개인정보 등에 대한 위협 차단

①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(가품) 강력 대처

□ 가품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 강화[특허청]

○ (현황) 기존 가품 모니터링은 **국내 유통 제품에 편중**되어 **해외플랫폼 모니터링**에 **한계**, 가품을 적발하더라도 **제재** 등의 **법적 근거**도 **부재**

○ (대책) 해외플랫폼에 대한 **모니터링 본격화***, 플랫폼사의 **이행강제** 및 **제재**(대외 공표 등)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(상표법 개정 '24)

*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(시범사업, 24下), K-브랜드 업체 협력 집중 모니터링('24) 등

□ 가품 차단을 위한 스마트 통관시스템 도입[특허청·관세청]

○ (현황) 개인의 해외직구는 **통관단계**에서 **대량의 물품**이 **반입**되어 **가품 확인**에 **애로, 상표법상 단속 근거**도 **불분명**

○ (대책) 특허청-관세청 보유 **정보**를 **실시간 매칭**하는 **차단시스템 도입**('24.5~) 및 **가품 단속 근거*** **명확화**(상표법 개정 '24)

* (현행) 양도 목적의 수입 등만 침해행위 해당 → (개선)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도 포함

② 개인정보 보호 강화

□ 개인정보 유출 차단[개인정보위·방통위]

○ (현황) 해외플랫폼의 **개인정보 처리방침, 안전조치 수준** 등이 **국내 기준**에 **미달**하여 개인정보 **유출, 오·남용 우려** 증가

- 또한 플랫폼 기업이 **앱 이용자**의 **정보**에 **접근**할 경우, **접근 항목** 등을 **명확히 고지**하고 **동의**를 받아야 하나, 이를 **준수하지 않는다**는 **지적 제기**

○ (대책) **개인정보위·방통위** 중심 **집중 점검** 실시, 상반기 중 **결과 공표** 및 **미흡 사업자 대상 개선조치**

* (개인정보위)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 중('24.2월~6월)
(방통위) 앱 접근권한 관련 위반 여부 기점검('24.3월), 결과 분석 중

□ 개인통관부호 보호 강화[관세청]

○ (현황) 직구에 필요한 **개인통관부호**를 **도용** 또는 **악용**하는 사례 속출

○ (대책) **사전검증 강화***, **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**** 추진

* (현행) 부호+성명or전화번호 일치 → (개선) 부호+성명+전화번호 모두 일치 ※ 관세청 고시 개정('24)
** (현행) 직구에 대해서는 미적용 → (개선) 직구에도 적용

2. 소비자 피해 예방 · 구제 강화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(현황) **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급증**함에 따라 **소비자 불만·분쟁 관련 상담 건수도 증가**

○ **국가별**로는 **중국, 미국 순으로 상담 건수**가 많았고, **유형별**로는 **환불·교환 거부, A/S, 배송 문제** 등 급증

【3개년 국가별 해외직구 상담 현황】 (단위: 건)

순위	2021	2022	2023
1	미국(383)	중국(365)	중국(886)
2	중국(339)	미국(221)	미국(257)
3	일본(159)	영국(69)	싱가포르(57)
4	영국(90)	싱가포르(50)	일본(51)
5	싱가포르(52)	일본(42)	프랑스(40)

* **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**에 접수된 국제거래 관련 상담 건 중 **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건** 기준

【3개년 유형별 해외직구 상담 현황】 (단위: 건)

유형별 구분	2021	2022	2023
취소, 환불, 교환 지연·거부	720	873	1,941
제품하자, 품질, A/S	231	300	774
미배송, 배송지연	331	276	762
사업자 연락두절, 사이트폐쇄	178	169	300
계약불이행, 불완전이행	153	66	106

* **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** 국제거래 관련 상담건 기준

□ (문제점) 소비자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, **관련 정보 및 피해구제가 미흡**하고, 해외 플랫폼에 대한 **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**

○ 해외직구 관련 정보가 **부처별로 산재**되어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**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부족**

○ **국내 고객센터 미운영, 피해구제**(취소·반환·교환 등) **절차 미비**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**사후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움**

○ 국내 영업소가 없는 경우 **국내법상 책임·의무**를 강제할 수 없어 **국내법 준수 및 위반시 법적 제재에 한계**

☞ **해외플랫폼 및 판매제품**에 대한 **전반적인 실태조사, 피해 예방·구제 실효성 확보,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** 등 **대책 마련 필요**

2 대응방안

◈ **소비자 피해 현황** 파악을 위한 **범정부 해외플랫폼·판매제품 실태 점검**
◈ 소비자피해 **예방·구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**
◈ **피해 사각지대 해소**를 위한 **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**

1. 범정부 해외플랫폼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

□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조사[공정위·관세청]

○ (현황)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, **해외플랫폼 사업자**의 **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**에 대한 **면밀한 파악 필요**

○ (대책) 플랫폼 사업자 대상 **소비자 보호 의무이행** 점검*(공정위), **통신판매자 관리** 및 **부정수입물품 유통**(관세청) 등 **실태조사** 실시

*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

- 조사 후 **결과 공표** 및 법 위반 사항 관련 **조치** 등 **시행**

□ 플랫폼 판매 제품 점검[산업부·환경부 등]

○ (현황)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**유통되는 제품** 및 플랫폼의 **개인정보 관리**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은 미흡

○ (대책) 총 8개 부처에서 **제품**(어린이제품·전기용품·의약품 등)과 **정보관리**(개인정보·앱접근권한 등)에 대한 **전방위 점검** 및 **조사** 실시

- 점검 후 **위해제품 반입차단 확대** 검토 및 관련 제재 추진

〈 부처별 점검·조사 주요내용 〉

· (**산업부**) **어린이제품**, **전기·생활용품**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추진
· (**환경부**) **생활화학제품**, **석면함유가능제품**, **중금속함유우려 장신구**, **어린이용품** 등 안전성 조사
· (**식약처**) 의약품, 의료기기 등 집중 모니터링('24.4월~)
· (**특허청**) **K-브랜드** 및 **건강·안전용품**(유아용품, 자동차부품 등) **가품**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
· (**여가부**) 성인용품 판매에 대한 **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** ('24.2월, 3월) 및 상시 모니터링
· (**개인정보위**) 개인정보 처리방침, 국외이전 등 **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** 조사 중('24.2월~)
· (**방통위**) **앱 접근권한** 관련 사항(이용자 동의, 필수·선택권한 구분 등) 준수 여부 점검('24.3~4월)
· (**과기정통부**) 피싱, 악성앱, 악성코드 유포 등의 **사이버 공격 탐지·대응** 강화

2.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

□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[공정위 등]

○ (현황) 국내에 주소·영업소가 없는 해외플랫폼의 경우 **국내법상 책임·의무 이행**(소비자보호, 가품 제재 등)을 **강제하기 어려움**

○ (대책) 해외 플랫폼 이용시 발생한 **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, 법적 제재 및 책임부과** 등을 위한 **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**

〈부처별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법률 개정 검토(안)〉

· (**공정위**) **소비자 피해구제·분쟁해결 담당, 문서송달 및 조사 대상**으로 지정
(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(3.27~5.7))
· (**산업부**) **KC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** 등 의무(전기생활용품안전법, 어린이제품법 개정 추진)
· (**특허청**) **위조상품 차단 조치 이행**(상표법 개정 추진)

□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자율협약 체결[공정위 등]

○ (현황)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 증가에 따라 **불법·위해제품**으로 인한 **소비자 피해 증가**

○ (대책) **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물품·정보**에 대한 **사전예방** 및 **실효성 확보 보완조치**로 **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 체결** 추진

〈부처별 자율협약 추진 주요내용〉

· (**공정위**) **위해제품 정보 공유** 및 **유통·판매 차단** 등 제품 안전에 대한 자율협약 체결
* 5.13(월) 공정위(소비자원) - 알리·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
· (**방통위**) **청소년 유해정보**에 대한 **청소년 접근 제한조치** 등 자율규제 협조 추진
· (**식약처**) **식품·의료제품 불법유통·부당광고**에 대한 **플랫폼 자율차단 체계** 구축
· (**과기정통부**) **상품 검색·추천서비스** 결과 노출 **기준공개, 광고 여부 설명** 등 자율규제 참여

□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운영[공정위]

○ (현황)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의 경우 **국내 고객센터 및 상담직원 부재**로 원활한 소비자 상담 및 불만 해결이 어려운 상황

○ (대책) **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** 등의 **실효성 확보 보완조치**로서 해외플랫폼에 **핫라인 구축** 협의 및 **국내 고객센터 설치** 권고*

* (알리익스프레스) 국내 고객센터 설치 및 한국어 상담 직원 배치

3.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위 등

○ **(현황)** 현재 부처별로 해외직구 물품과 관련하여 **12개**의 **사이트**를 **운영***하고 있으나,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**소비자 편의성 부족**

* 공정위, 관세청, 식약처, 환경부, 국표원, 한국소비자원 등이 포털 운영 중

○ **(대책)** 12개 사이트에 산재된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**소비자24***에 **통합**하여 **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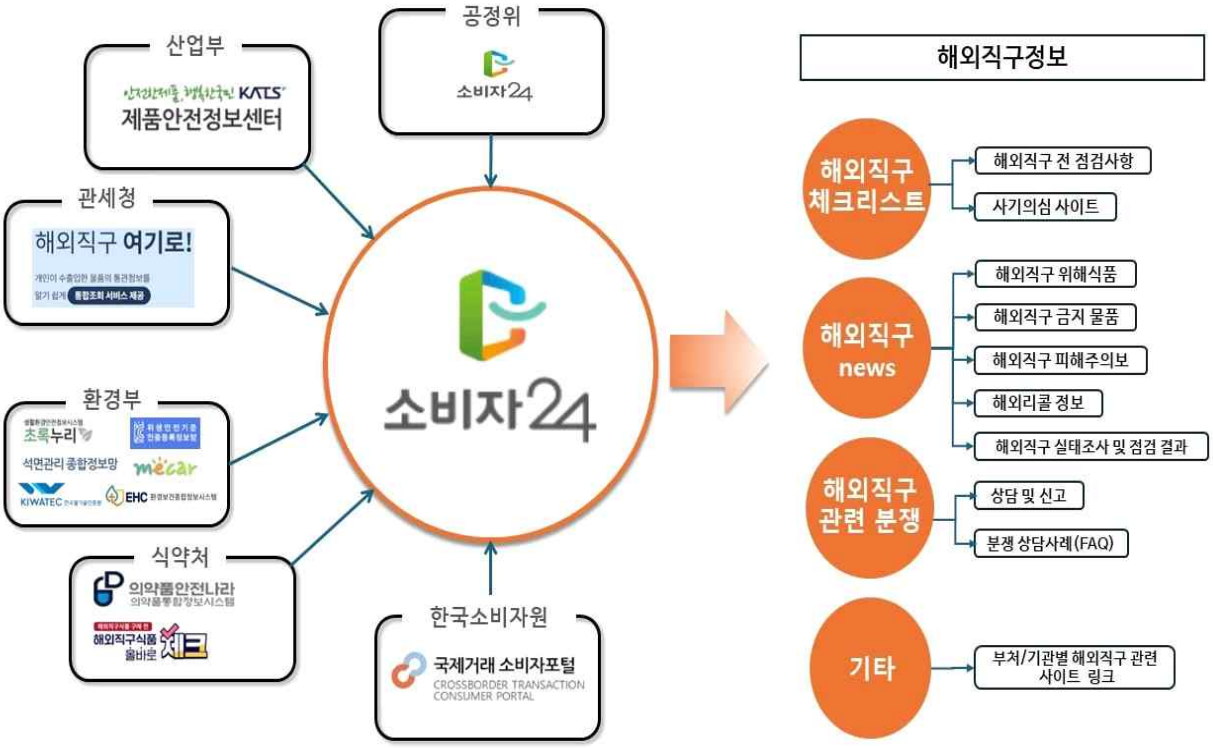
* www.consumer.go.kr (공정위 운영)

- **(사전 점검)**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**유의사항 및 점검사항** 등을 설명하고, **사기의심 사이트** 정보를 안내

- **(해외직구 News)** 해외직구 **금지물품·위해식품**, 피해주의보 발령 사항, 국내외 **리콜 제품 정보, 실태조사 결과** 등을 종합 제공

- **(해외직구 관련 분쟁)** **상담 및 신고** 안내 및 **상담사례** 제공

[**해외직구 정보 통합 관리**(소비자24)]



3. 기업 경쟁력 제고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**세계 온라인 유통 시장**은 코로나19 전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**'23년 5.8조 달러**에 달하는 **거대시장**으로 확대

*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규모(Statista, 조$) : ('17) 2.4 → ('19) 3.4 → ('21) 5.0 → ('23) 5.8

○ 특히, 국경을 넘는 **크로스보더 온라인 유통 시장**(CBEC) **급성장** 전망

* Cross-Border eCommerce 시장 전망(SNS INSIDER, 조$) : ('22) 0.95 → ('30) 6.1

□ **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온라인 유통 강국**이나, **내수 시장 위주**

* 이커머스 시장 매출액('23, 억$) : (中) 29,311 (美) 11,368 (英) 1,986 (日) 1,908 (韓) 1,252

○ **크로스보더**(CBEC) **시장 비중**은 **해외와 비교시 매우 낮은*** 편이며, **우리 제품의 해외 직구 수출**(역직구) **규모**는 **감소****

*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 대비 CBEC 비중('23) : (세계 평균) 28.4% (한국) 약 4%
** 온라인 해외판매액 : ('21) 4.4조원 → ('22) 1.8조원 → ('23) 1.7조원

□ **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**은 **온라인 유통 플랫폼, 유통 소상공인**(플랫폼 입점업체 등), **제조업체** 등으로 구성

○ **거대 자본***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**글로벌 유통 플랫폼**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**국내 유통플랫폼 전반의 경쟁력 약화 우려**

* 기업별 영업이익('23) : (알리바바) 23.3조원 (핀둬둬) 11.1조원 (쿠팡) 6,174억원

○ **낮은 생산원가, 관·부가세 면제** 등에 따른 **해외 소비재의 직구 증가**는 **국내 유통소상공인**과 **제조업체**의 **가격경쟁력 상실** 요인 초래

* 해외직구 비중이 높은 패션·의류, 가전·전자기기 등 분야에서 중국산으로 대체 가속화

○ **코로나19 이후 성장세**가 **둔화***된 **유통산업 생태계의 활성화**를 위해 관련 업계는 **규제·법제 개선도 지속 요구**

*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(전년대비) : ('19) 20.6% → ('21) 20.2% → ('23) 8.4%

2 대응방안

◈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첨단 인프라 확산 및 기술개발 강화
◈ 유통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역직구 확대 지원 강화
◈ 온라인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지원기반 구축

1.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

□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인 풀필먼트 확산 및 고도화[산업부·중기부]

○ (현황)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**다품종 소량거래, 적시적소 배송** 등을 위해 **인프라 확산** 및 **산업 육성 전략 필요**

○ (대책) **풀필먼트*** **확산·고도화** 및 AI 활용 등 **유통산업 혁신 강화**

* 제품 입고 → 관리 → 포장 →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·효율화하는 인프라

- **풀필먼트 보급 확산** 및 **고도화 기술개발***,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('24.말) 등을 통해 **소비지 인근 중소유통업체**의 **온라인 활용 촉진**

*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,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

- **「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」**('24.9) 및 **「유통·물류 AI 활용 전략」**('24.10) 등을 통해 기술개발, 생태계 구축 등 **온라인 유통산업 혁신 지원**

□ 물류센터 공유(벤더플렉스) 활성화[산업부]

○ (현황) 기존 제조 및 납품 업체-플랫폼-소비자로 이어지는 배송방식*은 **대형 물류공간 확보** 및 **추가 운송** 등 **불필요한 비용**이 **발생**하는 **경우도 존재**

* 제조납품 업체가 플랫폼 업체 물류창고에 입고, 플랫폼 업체가 물류창고 보관후 소비자에게 배송

○ (대책)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*하여 **배송 단계를 단축**하는 **배송물류 효율화 지원**

* 제조·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
(기존) 제조·납품 업체 → 플랫폼업체 → 소비자 / **(개선)** 제조·납품 업체 → 소비자

2.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

□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[산업부·중기부]

○ (현황) 기존 해외 제품을 단순 중개 유통하는 사업모델은 지속 가능성에 한계, **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모델 필요**

○ (대책) 유통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**브랜드 인큐베이팅*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**

* 소규모 브랜드 기획·소싱·마케팅 등 발굴 →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

- (예시) A기업은 유망 중국산 제품(마사지기기류)을 발굴하고 제조 과정에 관여하는 등 자체 브랜드화를 통해 연 매출 130억원의 건강 전문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

□ 소싱 대상국 다변화[산업부]

○ (현황) 유통소상공인의 제품 소싱 대상국이 일부 국가에 편중

○ (대책) 원료 생산지 등으로 소싱 대상국을 다변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현지업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사례* 확산 등 지원**

* (소싱 다변화 품목) 니트릴 장갑, 애완동물 사료, 목재제품, 커피, 플라스틱 제품 등

3. 중소 유통 · 제조기업 수출(역직구) 확대

□ 역직구 판로 확대 지원[산업부·중기부]

○ (현황) 영세한 중소 유통·제조기업은 **글로벌 플랫폼 활용에 한계**

○ (대책) 글로벌 플랫폼 입점 및 판로 확대를 위해 **마케팅 지원 강화*,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및 국내 플랫폼과 동반 해외진출 지원****

* 해외 쇼핑몰 직접입점 및 마케팅 지원을 ('23) 400개사 → ('24) 900개사로 확대

** 코세페 활용 국내 플랫폼 글로벌 인지도 제고, KOTRA 무역관 활용 현지 홍보 등

□ 역직구 물류 지원[산업부]

○ (현황) 중소 입점업체의 역직구 수출시 해외 **물류·배송 등 애로 발생**

○ (대책) 전자상거래를 통한 역직구 추진기업의 물류 지원을 위한 **해외공동물류센터* 확대**(['22] 238개 → ['23] 261개 → ['24] 270개)

* 미국·일본·동남아에서 아마존·큐텐·쇼피 등을 활용하여 판매된 우리 제품 배송 물류 지원

4.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 활성화

□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개선[산업부 등]

○ (현황)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**국민 불편·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유통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**

* 새벽배송 미시행지역 주민의 84%가 새벽배송 희망 ('23.10, 대한상의)

○ (대책) **새벽배송 허용 적극 추진, 규제 지속 발굴·개선**

-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**유통규제 개선**으로 국내 및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**성장계기 마련**(유통법 개정)

*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(오전 0시~ 10시)내 새벽배송 허용

- 학계·업계·정부 공동 **「유통미래포럼」 발족**('24.5),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업계가 요구하는 **규제 발굴·해소**

□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 기반 정비[산업부]

○ (현황) 온라인 유통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**유통법은 오프라인 유통 중심**이며, **유통산업 통계도 국내기업에 한정**

○ (대책) 유통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유통 부문 **산업분류 개선***, **온라인 유통산업 지원** 등 **온라인 유통산업 육성 근거 마련**

* 現유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무점포판매 유형을 인터넷, 모바일 판매 중심으로 개정

- 온라인 유통산업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해 **온라인 유통 통계 대상에 국내진출 글로벌 기업**(국내 대리인 지정 기업)까지 **포함도 추진**

* 통계청 승인통계인 「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」에 온라인 유통 매출도 포함 추진('24년말)

□ 플랫폼-입점업체간 상생협력[산업부·중기부 등]

○ (현황) 대형 플랫폼과 중소 입점업체간 **상생을 위한 소통채널 부족**

○ (대책) 온라인유통 얼라이언스*를 구성하여 **상생안을 마련**하는 등 **생태계 조성 지원**, 주요 생필품에 대한 **플랫폼별 가격 정보 조사·발표 추진**

* (구성) 플랫폼, 유통소상공인, 제조사, 동반위 등 (예시) 물류비용 지원,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등

4.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

(1) 면세 시스템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자가사용 물품은 **소액 면세한도**(150달러, 미국발 200달러) 이내 **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세**가 이루어짐

○ 해외직구 물품은 **관·부가세 면제**로 국내 **일반 제조·수입업체** 물품에 비해 **가격 경쟁력*** 면에서 우위를 가져, 이에 대한 **형평성 문제** 지적이 있음

* 동종 중국직구 물품이 70~80% 저렴 (국내업계 의견)

○ 또한, **소액면세 제도**를 **악용**하여 **의도적인 분할**(쪼개기) 후 **면세 통관**을 **시도하는 사례**도 발생

*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, 면세통관 후 상용으로 판매

< 해외 사례 >

· (중국) 부가세 부과 및 해외직구한도 설정(1회 90만원, 연간 480만원)
· (EU) '21.7월부터 부가세 면세 폐지, '28년부터 관세 면세 폐지
· 영국('21.12), 호주('18.7월), 뉴질랜드('19.12월) 등 부가세 면세 폐지

2 대응방안

□ 국내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여부 검토[기재부]

□ 소액면세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[관세청]

○ **조직적인 분산·반입 행위**와 같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해 **사후 정보분석·상시단속** 등 **강화***

* 분기별 기획단속 및 해외직구 집중시기 특별단속 실시

(2) 통관 시스템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**해외직구 물품**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**간이한 통관절차**를 거쳐 반입되어 **위해제품 적발**이 **곤란**

○ 또한 **해외직구 급증**으로 **세관 직원**의 **업무 부담 증가, 통관 검사 품질 저하 우려*** 및 **물류 지체**** 발생

* 통관직원 1인당 처리 건수는 41.7만건으로 전년대비 31%↑, x-ray 판독 시간은 건당 1~5초

** 해외직구 성수기 : (항공특송) 1~2일 → 3일 이상 소요, (해상특송) 2~3일 → 4일 이상 소요

2 대응방안

□ 위해제품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통관 시스템 구축[관세청]

○ (**통관서식 변경**) **위해제품**을 **사전**에 **선별**하기 위해 **필요한 제품 모델, 규격** 등의 **통관서식**의 **기재 항목** 확대

- 일부 위해제품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**간이 통관절차 적용**을 **배제***

* 예) 해외직구 농산물의 경우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예외 없이 검역요건 구비

○ (**통관 플랫폼 구축**) 온라인 플랫폼 **주문정보**를 **사전 입수**하여 위해 제품 반입 차단에 활용 가능한 '**전용 통관 플랫폼**' 구축(~'26)

□ 통관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·전문성 보강[관세청]

○ (**인력 보강**) X-ray 판독, 개장검사, 통관심사 분야의 **인력 보강 추진**

○ (**전문성 제고**) 수입요건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직구물품의 수입검사 및 성분분석(안전성 검사) 확대* 추진

* 현재 관세청 및 소관부처 전문인력 50여명(2개 센터 및 2개 팀) 운영 중

Ⅵ. 향후 추진계획

◈ 신속한 **입법 추진** 및 **현장 조기 안착**을 위한 **대국민 홍보 강화**

□ (**법률 개정**) 위해제품 관리 강화,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등 법률 개정 사항은 **연내 신속 개정 추진**

* (위해제품 관리 강화) 어린이제품법, 전기생활용품안전법, 화학제품안전법 등 10개 법률
(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) 전자상거래법 등 4개 법률

○ **법률 개정 전**까지는 **관세법***에 **근거한 위해제품 반입차단 실시**, 관세청-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**6월 중 시행**

* (관세법 제237조)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

□ (**홍보 강화**)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**소비자24**는 **5.16일**부터 개편 가동하고, **해외직구 유의사항, 위해제품 정보** 등 **대국민 안내·홍보 강화**

○ 이를 통해 **정보가 불분명한 제품**에 대한 **소비자**의 **신중 구매를 유도**

□ (**대책 점검·보완**) **해외직구 TF**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 등 **주기적 점검, 상황**에 따른 **추가·보완대책**도 **마련**

※ 참고2 : 세부 이행과제

☞ **복잡·다양·산발적**으로 발생하는 **해외직구 이슈**의 **특성**상,
이번 발표 이후에도 **해외직구 TF는 지속 가동,**
진행상황 지속 점검 및 **추가·보완 대책*** **신속 마련·추진**

* △ 개인정보 침해 등 <u>범정부 실태 조사·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</u>
△ (가칭)소상공인 종합대책 등 <u>유통산업·소상공인 경쟁력 제고</u>를 위한 추가 대책
△ 기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<u>새로운 이슈 대응</u>

참고1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

부처	구분	품목
산업부 (국표원)	어린이제품(34개) * 어린이제품법	어린이용 물놀이기구, 어린이 놀이기구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어린이용 비비탄총, 유아용 섬유제품,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,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(보호장구 및 안전모),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, 아동용 이단침대, 완구, 유아용 삼륜차, 유아용 의자, 어린이용 자전거, 학용품, 보행기, 유모차, 유아용 침대, 어린이용 온열팩(주머니난로 포함), 유아용 캐리어,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, 어린이용 가죽제품,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, 어린이용 물안경,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,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,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, 어린이용 스키용구, 어린이용 스노보드, 쇼핑카트 부속품, 어린이용 장신구, 어린이용 킥보드,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, 어린이용 가구, 아동용 섬유제품 + ∝ (모든 어린이제품)
	전기·생활용품(34개) * 전기생활용품안전법	전선·케이블 및 코드류, 스위치, 전자개폐기,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,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, 퓨즈, 차단기, 교류전원 전기찜질기·발 보온기, 전기충전기, 단전지, 램프홀더, 일반조명기구,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, 리튬이차단전지, 전기기기용 제어소자, 컴프레서, 전기온수매트, 폐열 회수 환기장치, 수도 동결 방지기, 전기정수기, 전기헬스기구, 기포발생기기,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, 유체펌프, 전기욕조,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, 전지, 전력변환장치, 리튬 이차전지시스템, 재사용전지모듈, 재사용전지 시스템, 자동차용 재생타이어, 가스라이터, 비비탄총
환경부	생활화학제품(12개) * 화학제품안전법	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,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, 가습기용 소독·보존제,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·소독제, 보건용 살충제, 보건용 기피제, 감염병예방용 살충제, 감염병예방용 살서제, 살균제, 살조제, 기피제, 목재용 보존제

참고 2 세부 이행과제

연번	과제명	추진시한	담당
1 소비자 안전			
1	· 어린이제품(34개), 전기·생활용품(34개) 직구금지	~'24.下	산업부(국표원)
2	· 생활화학제품, 석면함유가능물질 등 반입차단	~'24.下	환경부
3	· 화장품, 위생용품 반입차단	~'24.下	식약처
4	· 의약품·동물용의약품 기준 명확화	~'24.下	식약처·농식품부
5	· 차단 제품별 홍보 강화	즉시	산업부 등
6	· 수도·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제품 통관강화	~'24.下	환경부
7	· 가품 적발 관련 제재 근거 마련 등	~'24.下	특허청
8	· 개인정보 무단유출 점검·조치 등	~'24.6월	개인정보위
9	· 개인통관부호 보호 강화	~'24.下	관세청
2 소비자 보호			
10	· 범정부 실태조사 실시	~'24.下	공정위 등
11	· 국내 대리인 지정	~'24.下	공정위 등
12	· 자율협약 체결	~'24.上	공정위 등
13	· 핫라인 구축	~'24.上	공정위 등
14	· 해외직구 정보·서비스 통합제공	즉시	공정위 등
3 기업 경쟁력 강화			
15	· 온라인 유통플랫폼 경쟁력 강화	~'25	산업부·중기부
16	· 유통소상공인 지원	~'25	산업부·중기부
17	· 중소 유통·제조기업 수출(역직구) 확대	~'24.下	산업부·중기부
18	· 관련 규제·법제 정비	계속	산업부 등
19	· (가칭)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	~'24.6월	중기부
4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			
19	·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	즉시	기재부
20	· 소액면세 악용 단속 강화	즉시	관세청
21	· 통관 서식 개선	~'24.下	관세청
22	·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	~'26.下	관세청
23	· 통관 인력·전문성 보강	~'24.下	관세청·행안부